

# 국감 막바지 상임위 곳곳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 문제위 이기흥체육회장·최재혁 대통령실 비서관 여야 합의 의결 야, 국토위 김태영 21그램 대표·교육위 설민신 교수 단독 처리

국회 국정감사가 계속된 24일 상임위 곳곳에서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잇따르는 등 양당이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장과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등 불출석 증인 2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여야 합의 의결했다.

전재수 위원장은 "기관 증인인 이기흥 증인은 즉시 동행 명령을 집행하고, 일반 증인인 최재혁 증인은 오늘 오후 2시까지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위 소관 기관장인 이 회장은 지난 23일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남원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입지 선정 관련 업무 협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출석하기 어렵다"며 윤석열 체육회 사무총장이 대신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문제위 여야 의원들은 지난 22일 체육회 국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체육회의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전 KTV 방송기획관을 지낸 최 비서관의 경우 지난해 김건희 여사의 KTV 국악 공연장 방문과 관련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최 비서관에 대한 동행명령은 두 번째다. 문제위는 지난 15일 국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최 비서관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집행을 시도했으나 소재지를 확인하지 못해 집행에 실패했다.

국토교통위원회도 이날 종합감사에 불출석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 참여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동행명령 대상은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의사를 밝힌 김태영 21그램 대표, 이재선 원탑종합건설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 등 관저 의혹 관계자 3명이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김 대표는 2번이나 출석요구를 했고, 공식송달 절차도 마쳤다"며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야 한다"면서 동행명령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동행명령장 발부 요건은 여야간 합의된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라며 "출석요구 시한인 오후 3시까지 출석하지 않는다면 발부하러. 정치적 소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으나, 민주당 소속 맹성규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 주도로 안건을 의결했다.

교육위원회는 증인으로 채택했던 한경 국립대 설립인 교수와 김종량 한양학원 이사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 의원들은 안전 상정 때 회의장을 떠나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교육위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설 교수를, 교수 부정 채용 의혹 논란과 관련해 김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앞줄 왼쪽 두번째)이 24일 오후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 앞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및 구조공사와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인 김태영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 '민생 공통 공약 협의체' 28일 출범

### 공약·정책 패스트트랙 추진

지난 총선에서 여야가 내놓은 민생 분야의 공통 공약을 추진하는 협의체가 오는 28일 출범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지난 총선 때 여야가 함께 합의한 공약·정책과 민

생 법안에 대해 정쟁과 무관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의 28일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기구 명칭은 '민생 공통 공약 협의체'다. 국민의힘 한동훈-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1일

회담에서 이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여야 대표는 반도체산업·AI(인공지능) 산업 및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고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협의체에서 논의할 주요 법안으로 반도체·AI 등과 함께 자산시장 밸류업, 국회의원 특권 폐지,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어떤 법안을 논의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대통령실-한동훈 대표, 특별감찰관 추천 놓고 입장차

### 북한인권재단 이사 연계 놓고 설전

### 추경호 "후보 추천은 원내 사안"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24일 한 대표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겠다고 한 데 대해 "북한 인권 문제는 당의 정체성과 연결된 문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마치 가벼운 사안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인권 문제는 당 정체성과 연결돼 있고, 당의 정체성 또한 중요하다"며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의 연계 문제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로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

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추진하겠다는 한 대표의 방침을 비판한 것이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 당직자 회의를 통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전제로 하지 않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대표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건의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특별 감찰관은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지만,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에 수사 의뢰한 뒤 사퇴하면서 8년째 공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은 임명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면서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 대표는 "문재인 정권 내내 특별감찰관을 추진하지 않아 국민의힘은 그런 표리부동을 대단히 비판했다"며 "우리 정부가 반향점을 도는 시점에

아직도 특별감찰관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특별감찰관 추천의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은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 공감을 받지 어렵다"면서 "마치 우리는 특별감찰관이 하기 싫고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기 싫어서 서로 방치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대통령 주변 관리를 막기 위해 정치 기술을 부리는 것이라고 오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추경호 원내대표가 '후보 추천은 원내 사안'이라고 제동을 걸면서 특별감찰관 문제는 여야간 계파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다만,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가 어제(23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오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강력히 요구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국감 현장

## 민형배 "영화인 임금체불 10여년간 117억원"

세계적으로 영화, 드라마 등 K-콘텐츠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인의 임금 체불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 국회의원이 24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영화인 신문고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10여년간 영화인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영화인 임금체불 금액은 총 11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체불 금액은 13억2500만 원이었으며, 올해는 지난 8월 기준 8억 8200만원이 체불됐다. 건수로 보면 지난해 임금체불은 총 164건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 신고 처리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1년 100%를 마지막으로 2022년 78%, 2023년 53%, 2024년 현재는 59%로 2022년에 비



해 절반 정도로 감소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임금 체불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OTT 관련 집계를 시작한 지난해 영화인 신문고에 접수된 임금체불 건수는 74건으로, 이는 2023년 영화 임금체불 건수 67건을 넘어선 수치다.

민형배 의원은 "OTT라는 새로운 플랫폼의 부상으로 영화인 임금체불 문제에 새로운 고려사항이 나타나 상황"이라며 "영화진흥위원회는 OTT까지 포괄할 수 있는 임금체불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신정훈 "외국인 렌터카 과태료 급증 대책 필요"

지난해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건은 전년 대비 19% 증가하고, 미납액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31%대를 유지하던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건은 2023년 50.6%로 대폭 증가했다. 미납액도 2022년 1억9000만원에서 2023년 3억9000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63.1%가 미납됐으며, 최근 5년간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액은 총 12억5000만원에 이른다. 내국인과 달리 렌터카 반납 후 출국하는 외국인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고 징수하는 수단 자체가 미비



해 교통법규 위반 후 출국해 버리는 외국인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신정훈 의원은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외국인 여행객의 교통법규 준수 의무를 저버리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해의 가승인제도 혹은 호텔업계에서 운송 중인 보증금 제도 등을 활용해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